

# 경찰에 맞아죽는 시민들



문영숙(자유기고가)

## 영장제시도, 이유도 없는 불법연행

“난 집안 일밖에 모르는데, 아무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엔 강도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무작정 끌고 나가길래 인신매매당하는 거라 생각했다”는 손아무개씨(44, 주부)는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한숨을 쉬어가며 “이렇게 자꾸 알리면 무슨 수가 생기느냐,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알리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전날 약속했던 인터뷰를 거절했다.

손씨는 지난 90년 12월 혼자 집에 있다가 담을 넘어온 형사 4명에게 영문도 모르는 채 강제로 연행되어 검사 앞에서 인신매매 사실 자백을 강요당하며 수갑을 찬 채 발로 걷어채이고 구타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장제시는 물론 자신이 연행당한다는 사실을 아무 곳에도 알리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신분증 대조 결과 연행과정에서의 착오로 밝혀져 다음날 혐의를 벗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손씨는 이 일로 쉽게 치유되지 않을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손씨와 손씨의 남편은 이 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떠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담당검사가 수사관을 보내 사과해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개인적인 분노를 표현했을 뿐이다.

90년 10월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범죄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인권유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일축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였다. 우려했던 대로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사기관과 공권력의 가혹행위가 이전보다 더 공공연하게 자행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또한 속출했다.

범죄예방을 이유로 일반시민들에게 행해지는 불심검문과 불법연행, 길을 건다가 또는 집에 있다가 느닷없이 신분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검은 승용차에 실려서 낯선 곳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죽어서 나갈래? 살아서 나갈래?”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가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되었다가 올 6월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된 김성민씨(25, 술집경영)는 아직도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가지지 않는 듯 흥분된 어조로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작년 5월 8일 밤 12시경 부인과 아들, 그리고 이동훈씨(23)를 포함한 친구 3명이 함께 있던 김씨의 집에 신분도 밝히지 않은 남자 4명이 수갑을 찬 이주일씨(김성민씨의 친구)를 끌고 들이닥쳐 다짜고짜 이동훈을 내놓으라며 김씨와 친구 세명에게 수갑을 채워놓고 마구 구타한 후 모두 관악경찰서로 끌고 갔다. 경찰서 형사계로 끌려가자마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경찰 6~7명에게 다시 집단구타를 당한 김씨 등은 아무 조사도 받지 않고 무작정 2층으로 끌려 올라갔다. 세면장을 지나 통제구역이라 씌어진 방을 들어서자 책상 하나와 의자, 그리고 물주전자와 쇠파이프 등이 놓여 있는 어두컴컴한 실내 정경이 김씨의 눈에 들어왔다. 형사들은 처음부터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의 혐의사실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없었다. “너, 죽어서 나갈래? 살아서 나갈래?”라는 말뿐. 그들은 김씨의 옷을 벗긴 후 신문지를 감은 손목 위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 사이에 쇠파이프를 끼워 천장에 거꾸로 매달았고 그는 주전자로 콧속에 물을 들이붓는 고문과 얼굴에 수건을 씌운 후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는 고문 등에 시달리며 기절하기를 수차례, 거의 초죽음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 이때

노인 한 사람(삼호사 전당포 주인)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그를 고문하던 형사들은 “너, 삼호사 전당포 털었지?”라는 말로 그가 끌려와 고문당하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변호사 선임권을 요구하며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김씨에게 형사들은 이번에는 거자 탄 물을 코에 들이부었다. 만신창이가 된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해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 다른 형사팀들이 들어오더니 다시 그를 향해 “김성민, 너 아가방 알지. 아가방 강도사건 알지?” 했다. 어리둥절해진 김씨가 이를 부인하자 그에게는 다시 예의 그 끔찍한 물고문이 가해졌다. 그들의 협박 속에 아예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린 김씨는 다시 그들의 요구대로 허위자백을 했다. 그때까지도 김씨는 그 사건이 살인사건인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저녁에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 근무하는 의경들과 가벼운 말다툼을 벌였다. 시비 끝에 의경들이 “살인범 주제에 말이 많다”고 욕박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자신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다. 아울러 김씨는 친구인 이주일·이동훈씨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문을 당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음날 이들 3명을 나란히 앉혀놓고 조서를 꾸미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김씨는 형사에게 “알아서 꾸미시오”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 당시 김씨 등에게는 삼호사와 아가방 외에도 금은방 사건 등 5건이 더 추가되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대질한 피해자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함에 따라 혐의가 풀렸으나, 어떠한 검거실적에만 치중하는 수사행정의 주먹구구식 관행을 엿볼 수 있다.

송치된 다음날 검사 앞에 불려가자 한 가닥 희망을 품은 이동훈씨가 검사에게 하소연했다.

“경찰서에서는 무서워서 얘기 못했지만 검사님 앞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난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관악서로 이첩된 이씨에게 형사들의 매질과 발길질이 돌아온 것은 물론이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전당포 주인이 ‘실수로’ 김성민씨를 처음 본 곳이 고문실이라고 말함으로써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이 인정돼 1심과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올 6월 23일 1년여 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 김씨는 현재 단란했던 가정까지 파탄 나 아내와 별거중이다.



길거리에서 경찰이 다가오면 시민들은 공연히 불안하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다고 구둑발로 채이고 영장도 없이 파출소로 끌려가 맞아죽는 일까지 있었다. 경찰서갔다 하면 몇 대 맞고 나오는 것쯤 보통일이라는데 경찰 폭력의 현장을 찾았다.



또한 최근에는 고지식(?)한 전직교사가 경찰의 잘못을 나무라다 도리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 7월 11일 오후 4시경 동료교사와 함께 길을 가던 최중식씨(55)는 길모퉁이에 정차해 있는 경찰순찰차가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조금만 뒤로 빼면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지 않겠소"라고 차 안에 있던 2명의 경찰관에게 충고했다. 그러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한명이 문을 박차고 나와 허리에 손을 얹으며 "뭐야, 건방지게"라고 했다. 최 교사가 어이가 없어 "민간인이 이렇게 주차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견인해갔을 것 아니오"라고 항의했는데 다시 "무슨 참견이나, 경찰관에게 시비 붙을 거냐"라는 곱지 않은 말이 돌아왔다. 곧 이어 지원차 나타난 2명의 경찰관중 한명이 "집어넣어 버려" 했고 최씨는 실랑이 끝에 경찰서 형사실로 끌려가 다음날에야 방면되었다. 풀려난 이후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최씨는 경찰서장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고 경찰서장과 파출소장, 그리고 해당 경찰관들의 사과를 받고 일을 매듭 지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0여 일이 지난 후인 9월 4일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느닷없이 출두명령서를 받고 검찰에 출두하여 심문을 받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일 구속되었다.

"경찰조서에는 폭력상해로 올라갔는데 검사는 공무 방해라더군요"라며 어이없어 하는 최씨는 구속 당시 경찰이 피의자에게 알려주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10일 이내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알려주지 않았고 가족면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뒤늦게나마 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심리가 있던 날, 검찰이 갑작스럽게 '기습기소'를 해 구속적부심 청구도 못한 채 34일이 지난 10월 7일에야 보석심리로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다. 현재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최씨는 "이런 일이 나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이 자기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억울함이 증명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굳은 각오를 밝혔다.

#### 검문 거부하다 폭행당해 사망하기도

작년 12월 30일 밤에는 검정고시 준비생 송진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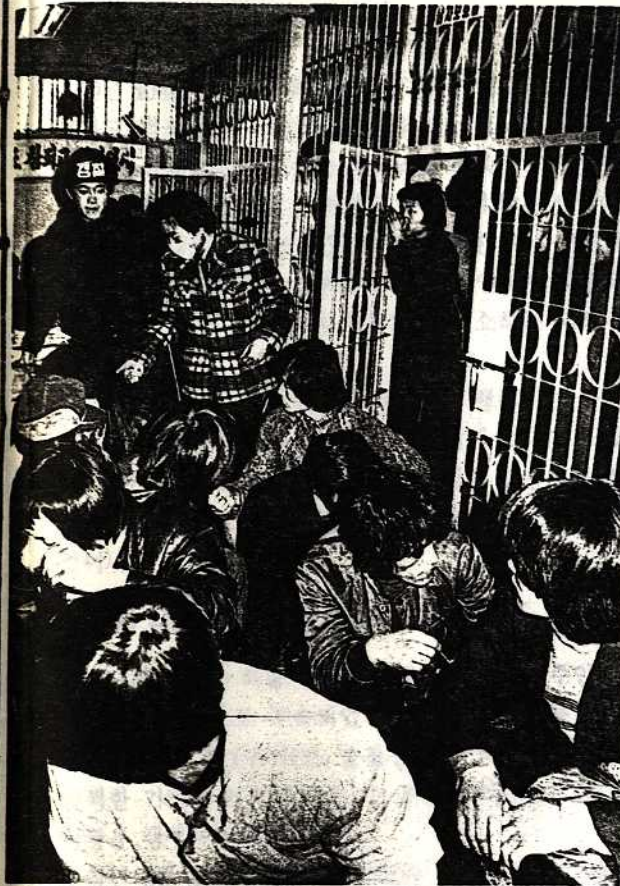
(당시 20세)가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다 구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친구 8명과 함께 2차 술자리를 위해 아현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던 이들과 이를 말리던 역무원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역무실에 끌려 들어간 이들이 역무원들과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 3명이 출동했다. 경찰이 무릎을 꿇고 앉으라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송씨가 "난 잘못된 것이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 2명이 송씨를 역무실 안 칸막이 뒤로 끌고 가 3, 4분간 온몸을 무차별 구타했고 송씨가 쓰러지자 발로 짓밟았다. 경찰에 의해 질질 끌려나와 친구들과 곁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의 가슴을 다시 경찰 1명이 발로 걷어차자 송씨는 옆으로 쓰러지면서 즉사하였다.

"직접적 사인은 보이지 않고 선천적인 심장이상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부검 결과에 대해 송씨의 외삼촌인 이종목씨(36, 해직교사)는 "개가 태권도가 4단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 사건에 관계된 경찰 3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진규 사망 후 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관계자와 상의해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청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항의방문과 농성을 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씨는 울분을 토했다.

고문에 의한 범인조작극의 또 다른 희생자 조항기씨(36, 상업)는 지난 5월 19일 변사체로 발견된 아내의 살해용의자로 몰려 그날 밤 10시 용인에 있는 그의 집에서 연행되었다. 그에게도 어김없이 물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자백이 강요되었으며, 결국 혐의사실이 없자 27시간 만에 풀어주었다. 그의 가족들(용인군 용인읍 역북리)은 "시간이 지나 겨우 잊어가고 있는데 다시 그 일을 들추고 싶지 않다"며 그 후 한 달간 통원치료를 받은 조씨가 현재는 용인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가 있다는 말만 전해주었다.

그 밖에 올 6월에는 경기도 부천시 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최강호씨가 순경의 구둑발에 얻어맞아 사망하였으며, 이어 7월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안정홍씨(28, 제주도 오라동)가 양근영군 남치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오인받아 형사들에게 집단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후 경찰로부터 공식사과를 받았고, 9월에는 길 가던 시민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



초안원을 이룬 경찰서 보호실.

행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는 등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불심검문, 연행에 대한 합법적 대응방법

이와 같은 공권력의 폭력성은 범죄와 관계없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무차별 행사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너무나 잦은 공권력의 폭력행태를 목격해온 우리 사회는 "경찰서에 끌려가면 몇 대 맞고 나오는 것쯤은 으레 있는 일"로 당연시해버려 스스로의 인권을 쉽게 포기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등 철저한 인권의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김기진 변호사의 도움말을 통해 불심검문이나 연행을 당했을 경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소지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연행할 수는 없다.

둘째,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경우 범죄현장이 아닌 경우나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행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다. 경찰은 동행이 유를 밝히고 승낙을 받은 후에만 구인이 가능하며, 이때 구금시간은 6시간을 넘지 못한다.

셋째, 부득이하게 경찰서에 구인되었을 경우에는 조사받기 전에 변호인 선임과 가족과의 연락을 요구하고 담당자의 이름과 신분을 확인해두어야 한다. 이는 만약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하다.

넷째, 경찰서에 연행되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풀려난 즉시 검진을 받아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불법행동자 개인에 대한 민사책임과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감금상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사소한 인권침해라도 공권력에 의해 자행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인권단체에 신고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피해자들의 사례를 종합해볼 때 연행이나 감금시 변호사 선임권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가족과의 연락마저도 두절된 무방비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마련이므로 일단 경찰서 취조실에 연행된 뒤에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되지 않으며, 밀실수사를 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연행을 거부할 경우 길거리에서 경찰이 집단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도 이를 태연하게 부인하는 현실에서 약자인 피해자가 경찰의 신분과 이름을 확인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도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의견이다.

제작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범죄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의 대부분이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범인검거에 더 치중하고 있고 그래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고문이나 폭행은 당연시하고 있으며, 특히 흉악범은 어느 정도 고통을 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은 현재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할 '국제인권규약'의 행방을 묻기에 앞서 착잡함을 안겨 준다. ▣